전남도 'F1 특별법안' 내국인 카지노 개설 조항 왜 뺐을까

# 강원랜드 반발에 밀렸나

## J프로젝트 성패 가를 '황금알' 사업

## 道 "관광법 개정 등 통해 개설 추진"

전남도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안'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성패의 관건으로까지 여겨지는 내국인카지노 개설 조항을 자체 삭제〈본보 10일자 1면〉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가 왜 자발적으로 관련 조항을 제외했는지, 내국인카지노가 중시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지 알아본다.

◇'명분부족', 일부 외압도(?)= 전남도는 F1특별법안에서 내국인카지노 개설조항을 뺀 것은 '명분부족'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입법 추진단계에서 일부 지역주민과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 일부가 사행심 조장 등을 이유로 내국인카지노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함으로써 전망이 불투명해져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치를 국제행사인 F1 개최 자체만으로도 버거운 데 내국인카지노 개설까지 함께 다루려다 자칫 F1의 초점마저 흐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했음직 하다.

그러나 전남도의 표면적인 이유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F1특별법 입법 초기부터 병행추진해 왔던 내국인카지노 개설에 큰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내국인카지노 개설의 법적 근거마련에 나섰던 올해 초 국내 유일의 내국인카지노인 강원랜드 쪽이 거세게 반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강원랜드와 현지 주민, 지역 여론주도층들은 전남지역에 제2의 내국인카지노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폐탄광개발 취지를 크게 저해한다며 강력하게 맞섰다.

따라서 F1특별법안에 내국인카지노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사전에 불씨를 제거하기위한 방편이라는 풀이도 있다.

◇내국인카지노는 황금알?= 지난 2000년 국내 최초로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라 내국인카지노를 개장한 강원랜드는 2004년까지 골프·호텔 등 부대사업을 포함한 매출액의 38%이상인 9천224억원을 관광개발·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세·국세로 환원했다. 또 2005년까지 전직원 4천 여명 가운데 64%를 지역주민으로 채워 고용효과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최근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국인 입장을 포함한 카지노사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이같은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J프로젝트에서 내국인카지노 개설을 강조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성공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즉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내국인카지노가 개설될 경우 외국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훨씬 유리해진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제2의 내국인카지노 개설 추진에 대해 강원랜드가 반대하고 나서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대안은 있나=전남도는 10일 서울에서 F1특별법 의원입법을 추진중인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내국인카지노는 F1특별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표발의 의원들로부터 F1특별법의 나머지 사항은 도의 원안대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도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이나, 서남해안개발계획 등에 J프로젝트 지구 내에 내국인 카지노를 개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F1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된 경험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 또한 그리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6자회담 재개 물꼬 트나

## 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평양 방문

### 北 복귀 설득…'미사일' 해결 압박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우다웨이(武大偉·사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0일 평양을 방문한다. 우 부부장의 평양행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후 처음 이뤄지는 중국 고위 외교당국자의 방북이어서 중국이 이번 북·중 대화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사태가 수습되면서 6자회담 재개라는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북한과 미·일 등 서방과의 대치가 심화되는 상황 악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우 부부장의 방북 결과를 본 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 처리 등 행동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 부부장은 당초 11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중국 외교부는 그가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체결 4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10~15일 북한을 방문하는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우 부부장이 방북기간에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점으로 미루어 카운터파트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미사일 발사 후속 대책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이 단독 제출해 미국, 영국 등 7개국이 서명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우 부부장은 사태의 악화를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을 적극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지난 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뜻을 같이 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 부부장이 내놓을 수 있는 설득카드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이 막히는 것은 물론 중국과도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경제적인 압박카드를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설득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이 미사일 사태가 불거지기 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비공식 6자회담 개최문제가 새삼 관심을 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우 부부장이 오는 17일 시작되는 주에 비공식 6자회담을 열자고 한 제안을 북한측에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9일(현지시각) CNN을 비롯해 미국 주요 방송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중국에 주문하면서 특히 CNN과 인터뷰에선 "앞으로 수일의 기간, 중국 대표단의 평양 방문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뉴욕 안보리에서 일을 진척(move ahead)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힐 차관보에 쏠린 눈** 북한 미사일 문제로 중국, 한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0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을 만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들어오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헤드헌터들이 본 전·현직 대통령 5명 평가

# 김대중>전두환>노무현>김영삼>노태우

5명의 전·현직 대통령의 적정 연봉 수준을 국내 유수 헤드헌터들에게 물은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봉이 평균 2억7천345만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억9천704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노무현 현 대통령은 1억3천만원으로 3위, 김영삼 전 대통령은 1억368만원으로 4위, 노태우 전 대통령은 9천46만원으로 가장 낮은 5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인터넷 언론인 머니투데이가 최근 헤드헌터 32명을 대상으로 생존해 있는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 등의 적정 연봉을 경제발전·물가안정·양극화해소·사회통합·평화외교 등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조사해 본 결과 나타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 평화외교(노벨상 수상 등), 사회통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적정 연봉은 0원에서 30억원까지 극과 극이었다.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의 주범이지만 경제발전 등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루한 '미사일' 설전만…? 오늘 남북장관급회담 성과 불투명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1~14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물론 아직 참가가 불투명한 북한이 참석할 경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회담 개최 여부를 고민하던 정부는 지난 7일 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회담의 의제를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로 못박았다.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과거에도 회담 당일에도 갑작스레 연기를 요청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개최 여부는 회담 첫날인 11일이 돼야 확실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북한이 회담에 참석한다면 북측 대표단은 11일 오후 평양을 출발, 동해 직항로를 통해 김해공항으로 들어온다.

북측 대표단은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식 내각참사, 맹경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측에서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유진룡 문화부 차관, 이관세 통일부 홍보관리실장, 유형호 통일부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긴장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참관과 만찬 등 일부 일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 전망도 불투명하다. 남측 대표단은 북측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과하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지만 북한이 이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지루한 설전만 오간 채 공동보도문도 작성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정부는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남북이 차기 회담 날짜를 정하며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